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2013. 8.



금융위원회

CONTENTS

- Ⅰ 추진배경
- Ⅱ 정책금융 평가
- Ⅲ 역할 재정립 방안
- Ⅳ 향후 정책금융 역량강화 방향
- Ⅴ 향후 추진일정



I

추진배경



I 추진배경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정책금융 패러다임 구축

1. 금융환경 변화

상업금융 역량확대 경제위기의 상시화

- 금융·자본시장 성숙
→ 시장친화적 방식 지원 요구
- 위기대응 안전판 기능 확대 필요
- 한정된 재원의 활용도 극대화 필요

2. 시장선도 기능 요구

창조·신성장산업 육성 선제적 위험투자 확대 필요

- 지원방식의 다변화 요구
(융자위주 → 투융자복합 지원)
- 창업·벤처기업 육성
- 해외프로젝트, 신성장 산업 지원

3. 정책금융 추진체계 보완

단순 기능재조정 탈피 시장마찰·기능중복 해소 필요

- 상업금융과의 마찰 해소
- 정책금융기관간 기능중복 축소
- 제로베이스 검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필요

II

지금까지의 정책금융 평가

1. 정책금융이란
2. 그간의 성과
3. 미흡한 점
4. 발전 방향



II 지금까지의 정책금융 평가

1. 정책금융이란

■ 전통적 정책금융의 개념 (상업금융과의 차이점)

- ① 정부 재정을 직간접적 투입(Financial Contribution)하여
- ② 지원 필요성이 있는 특정산업(Specificity)에 대해 ③ 우대금융(Favor) 지원

■ 정책금융의 기능

- ① 시장실패 보완 ② 시장안전판 역할 ③ 시장선도 및 육성·지원

■ 기관별 주요 업무

대내	산업은행	산업자금 공급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 및 사회간접자본과 신성장산업에 자금 지원
대외	수출입은행	수출입기업 자금지원,
	무역보험공사	대외거래 위험 인수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
중기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신용보증기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공

II 지금까지의 정책금융 평가

2. 그간의 성과

■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 주요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선도적 공급
- 특히, 수출 및 성장동력 사업, 중소기업 적극 지원

[주요기능]

50~60년대	70~90년대	90년대 후반 이후
전재복구,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중화학공업 등 주요산업 지원	첨단산업 지원, 시장안전판 역할 등

[지원방식]

대출 · 보증 등 양적 투입
상환기간, 금리 등 우대 제공
특정 산업 육성 지원

■ 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

- 시장실패 보완
- 97년 외환위기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 지원 : 유동성 공급, 구조조정 등 지원

II 지금까지의 정책금융 평가

3. 미흡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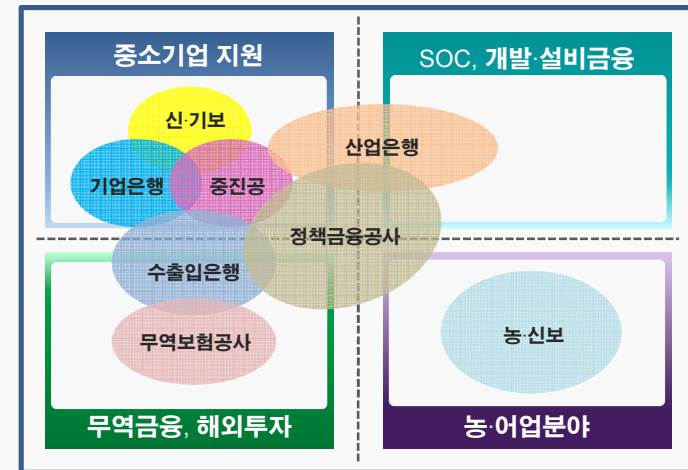
■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 변화 부족

- 기존 투입영역 고착 ↔ 신성장 분야 지원 부족
- 정책금융기관간 기능 중복
 - * 정책금융공사 vs. 산은 / 수은 vs. 무보 등
- 민간수행가능 영역에 대한 과도한 참여
 - * 12년 기준 : 수은 단기대출 비중 77%, 무보 단기보험 비중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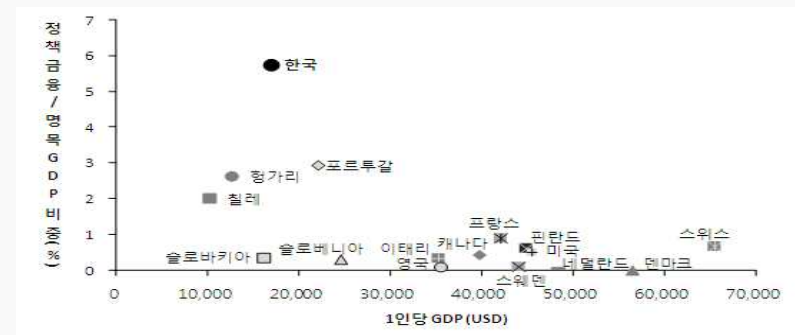
■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

[주요국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

구분	캐나다	영국	미국	한국	칠레
상업대출	91.9	95.0	88.6	87.8	80.4
정책금융	7.1	2.4	9.1	12.1	19.4
벤처금융	1.0	2.6	2.3	0.1	0.3



[GDP 대비 정책금융 비중]



II 지금까지의 정책금융 평가

4. 발전 방향

■ 개도국형 정책금융 → 선진국형 정책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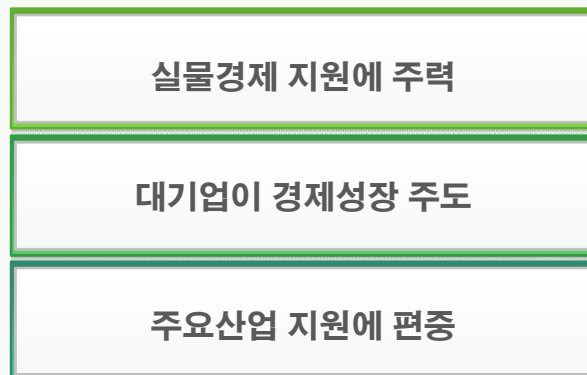
- 중요산업 지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지원
- 일방적 양적 투입 → 시장과 협업하는 맞춤 지원 (재정여건 감안, WTO 통상마찰 대비)
- 시장실패 보완 → 시장선도 및 시장안정 (경기순응성 완화,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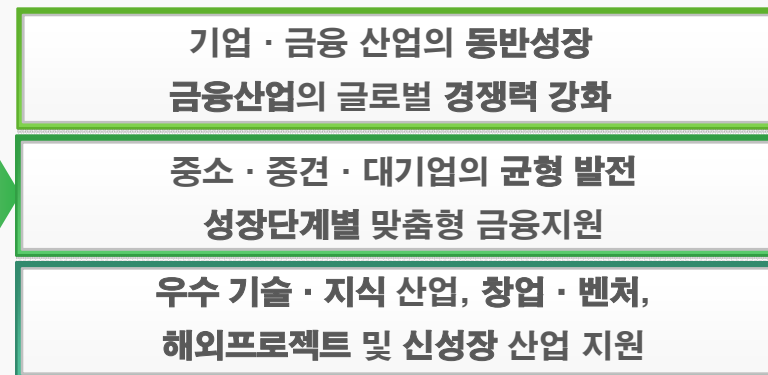
- 기관별 기능중복, 시장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낭비 해소

■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 역량 집중

[전통적인 방식 분야]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Ⅲ

역할 재정립 방안

1. 기본원칙
2. 대내 부문
3. 대외 부문
4.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5. 중소기업 부문



1. 기본 원칙 (Guiding Principles)

정책금융 기능의 명확한 재편 · 역할 정립으로 효과 극대화

1. 분산 · 중복 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

- 대내 · 대외 · 중소기업 등 기능별로 명확화 · 재정비
- 기관별 고유 · 핵심기능에 역량 집중

2. 창조경제 지원에 역량 집중

-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상업금융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지원

3. 불필요한 업무 과감히 정리

- 민간금융기관 참여확대 분야는 단계적으로 축소
- 정책금융기관간 중복기능 해소

2. 대내 부문 - 재정립 방향

- ◆ (Needs) 창조경제 실현 및 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
정책금융기관간 유사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 제거
 - (재정립방향) 산은-정금공 기관통합, 비핵심 자회사 매각
통합산은의 역량을 정책금융 핵심기능에 집중

대내부문 단일화

- 산은 민영화 유보, 정금공&산은&산은지주 통합으로 『통합산은』 출범
- 정금공 업무이관 : LP 투자, 온렌딩, 금융안정기금 운용(→산은)
해외업무 자산·부채·인력(→수은)

시장 마찰해소

- 매각 대상 : KDB캐피탈, KDB자산운용, KDB생명 (시장여건 감안, 단계적 추진),
대우증권(정책금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제외)
- 매각 제외 : KDB 인프라
- 산은 소매금융 업무 : 현행 수준으로만 유지 (지점확대, 신규유치 중단)

2. 대내 부문 - 고려사항

1. 산은법 전면개정

- 현행 산은법, 정금공법 폐지
- 민영화 조항 삭제 등 (단, IPO 등 통해 일부지분 매각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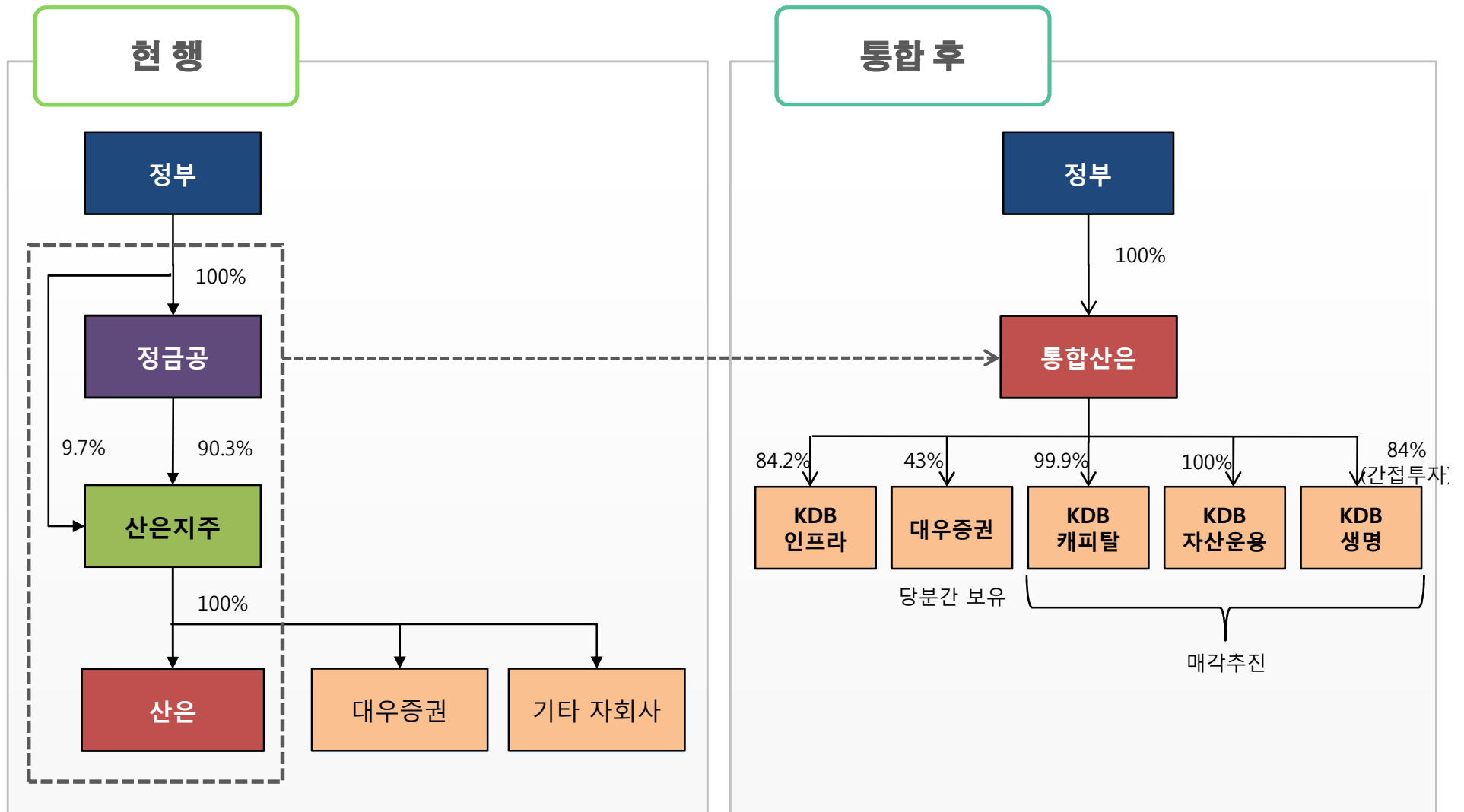
2. 금융안정기금 산은 이관

- 정금공의 금안기금 업무를 산은으로 이관 (산은법 및 금산법 개정)
 - 산은이 기업구조조정 등 금융시장안정 역할 수행하는 점 감안

3.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

- 정금공 등 통합에 따른 BIS비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0.68%~0.75% 하락 예측)
- 다만, 정금공 보유 무수익 자산(공기업 주식 15.5조원) 이관으로 향후 수익성 일부악화 전망

<참고> 산은-정금공 통합전후 지배구조 변화



2. 대내 부문 - 향후 비전



기본방향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장친화적 · 선진적 정책금융 역할 수립

추진방향

- ① 창조 · 신성장기업 지원에 적합한 종합적 정책금융 기능 확대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적재적소 자금 공급을 위해 투융자 복합 종합정책금융 제공
- ②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위기시 든든한 시장안전판 역할
- ③ 상업금융과의 마찰 축소

3. 대외 부문 - 재정립 방향

◆ (Needs) 중소기업 · 신흥국 수출지원 강화, 해외 건설 · 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 (재정립방향) 현행처럼 1국 2 ECA 체제 유지

수은 · 무보의 단기사업 비중 축소 → 해외플랜트 등 중장기사업 지원에 집중



핵심기능
강화

■ 현행 수은-무보 체계 유지 (정금공 해외업무는 수은으로 이관)

■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 강화

- 수은 · 산은 · 정금공 · 무보 구성 → 시중은행까지 참여 확대

- 협의대상 사업 범위 : 현행 20억불 이상 → 5억불 이상

■ 수은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 정비

- (현행) 수은지원 1억불 이상 , 대출비중 55% 이상 → (변경) 수은 대출비중 50% 초과

3. 대외 부문 - 재정립 방향



■ 수은 : 단기여신비중 단계적 축소 (17년까지 40%이내)

■ 무보

-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 원칙적 중단
-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 (17년까지 무보 점유율을 60% 이내로 축소)
-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단계적 축소 (신기보 중복)



■ 무보

- 기금부실화 예방을 위해 기금배수 하향 조정('17년까지 50~60배 수준)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연간 체결한도(국회 의결)를 추가하고 금융위 참여

■ 수은

- 금감원 검사범위 제한, 자율적 유동성 관리 유도 등 규제 합리화

3. 대외 부문 - 향후 비전



기본방향

1국 2 ECA 체제 유지 & 기관별 고유 영역 특화

- (수은) 중장기 수출신용
- (무보) 중장기 수출보험

추진방향

중장기 고위험 영역을 중심으로 ECA 핵심역량 강화

- 단기수출 금융 부문은 민간 이양
- ECA는 해외 프로젝트, 개도국 투자 등 중장기 고위험 영역에 집중
- 정책금융 상호간 지원을 줄이고, 상업금융의 중장기사업 참여 역량 선도

<참고> 수은-무보 兩立 체제 유지 이유

지원여력 축소

- 통합실익이 적음 : 무보는 별도기금으로 업무 수행
- 통합시 지원여력 축소 : 무보 기금배수의 적극적 활용에 제약

통합 시너지 불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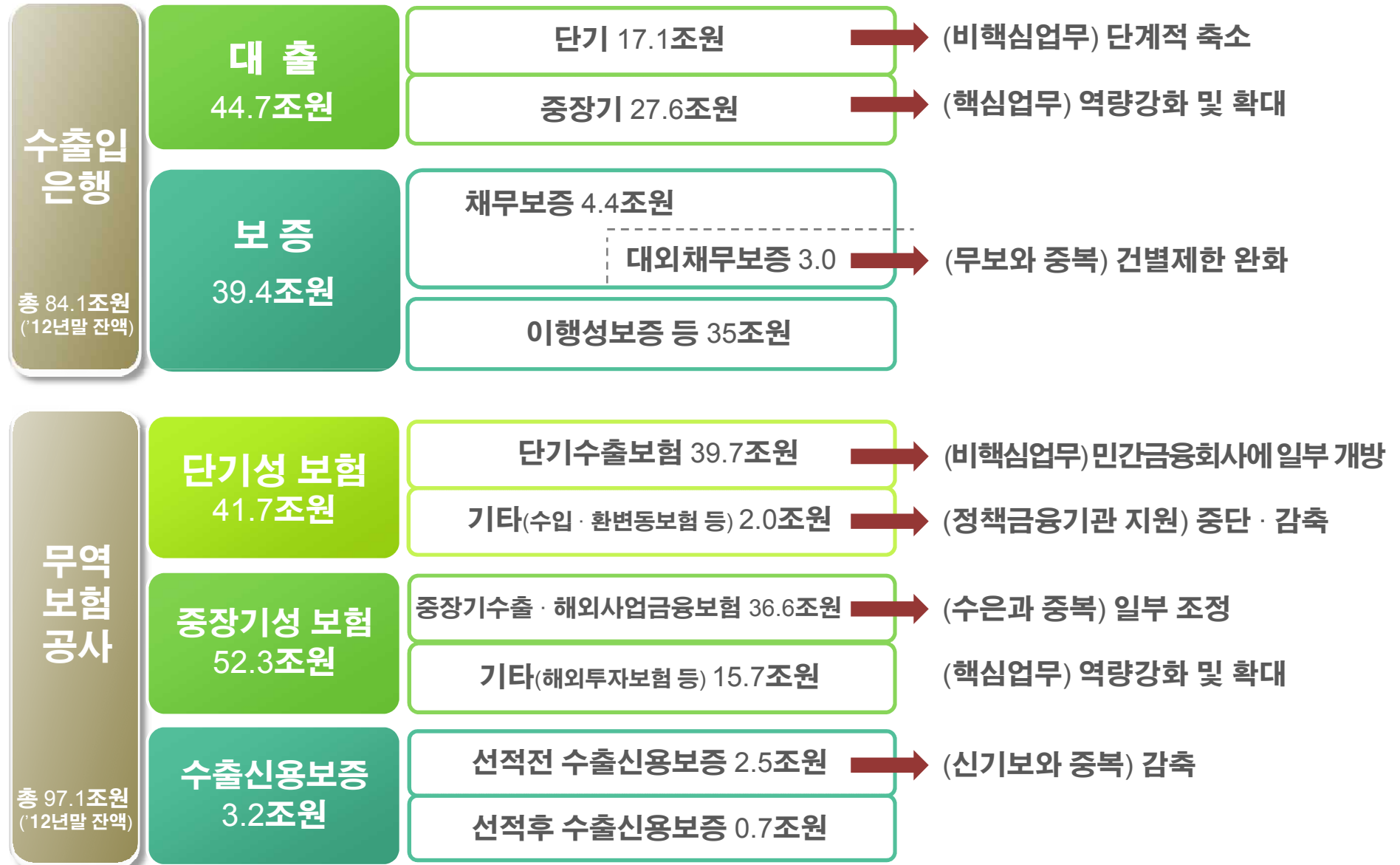
- 업무중복 영역이 작아* 중복해소 문제가 크지 않음

* 수은여신(84.1조) 중 무보 중복영역은 대외채무보증 3.0조원 수준 (전체의 3.6%)

해외사례와 불일치

- 독일, 일본 등 수출강국들은 우리나라처럼 1국 2 ECA 체제 활용

<참고> 수은-무보 역할재조정 후 영업자산 구조 변화



4.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 ◆ (Needs) 국가기간산업인 조선·해운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 (재정립방향) 통상마찰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세부 추진방안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 강화

- 선박채권 보증 도입
- 제작금융 규모 확대 등

해운보증기금 증장기 검토 (통상마찰 최소화 방식)

- 민간재원 활용
(50% 이상)
- 상업적 원리 운영

(가칭) 부산 해양금융종합센터 추진

-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약 100명)
부산 이전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선진화 방안 추진

- 수은·무보 추가 출자,
출연을 통해
해양금융 지원강화

5.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 ◆ (Needs)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중기 정책금융 역할 요구 확대
 - (재정립방향) 기은, 신기보의 지원역량 확대 → 중기지원 사각지대 해소
〈대출-보증-투자〉가 연계된 종합 중기지원금융 수행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융자 복합금융지원 (기은)
- 보증기관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민간의 후발투자 유인 (신기보)
- 기술평가 선진화 · 활용도 확대 (기보)
- 중소 · 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 확대(3조원→5조원) (산은 · 기은)
- 정책금융기관 출자(6조원중 1.95조원)로 성장사다리펀드 운영 (기은 · 통합산은)

5.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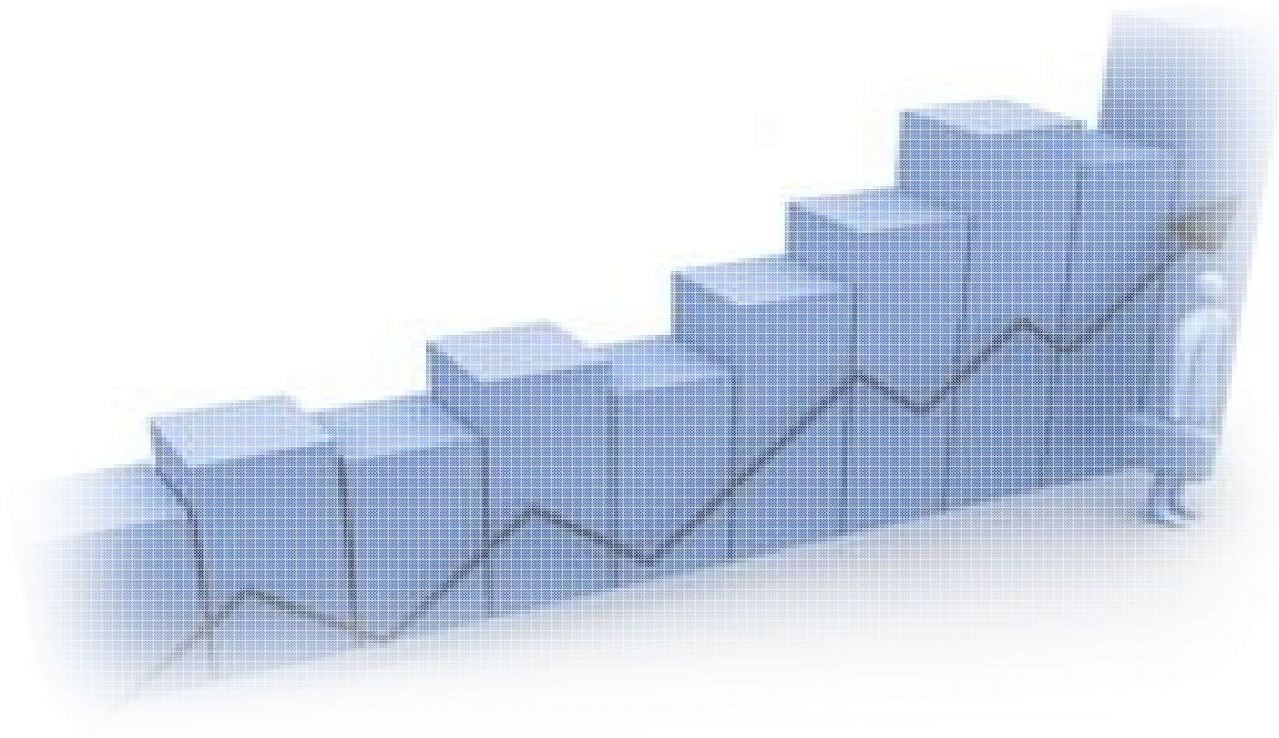
- 기업은행 : 정부지배지분(50%+1주)는 유지 & 취약중소기업 지원 확대
- 신·기보 : 미래가치 위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 기업은행
 - 해외진출 중소기업 자금공급 주도적으로 수행
 - 글로벌 은행과의 MOU 체결 확대 (현지 우량은행 통한 대출 및 지급보증)
- 신·기보 : 수출기업 보증지원 강화, 개도국에 대한 보증기법 전파

IV

향후 역량강화 방향



IV 향후 역량강화 방향-대내 부문

대내 부문

시장안정,
경제안전판

창조경제 지원,
금융시장 선도

통합산은

- 금융시장 내 리스크 요인 해소에 주도적으로 대응
 - * 기업구조조정 및 회사채 인수 등
- 장기 설비금융 지원
- 안정적 외화조달 창구 역할

- 산은 IB 기능+ 정금공 투자 기능
 - ⇒ 기업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Equity Financing 선도
- 미래·신성장산업 금융지원 선도

기업은행

- 위기시 취약기업 위주의 경기역행적 자금공급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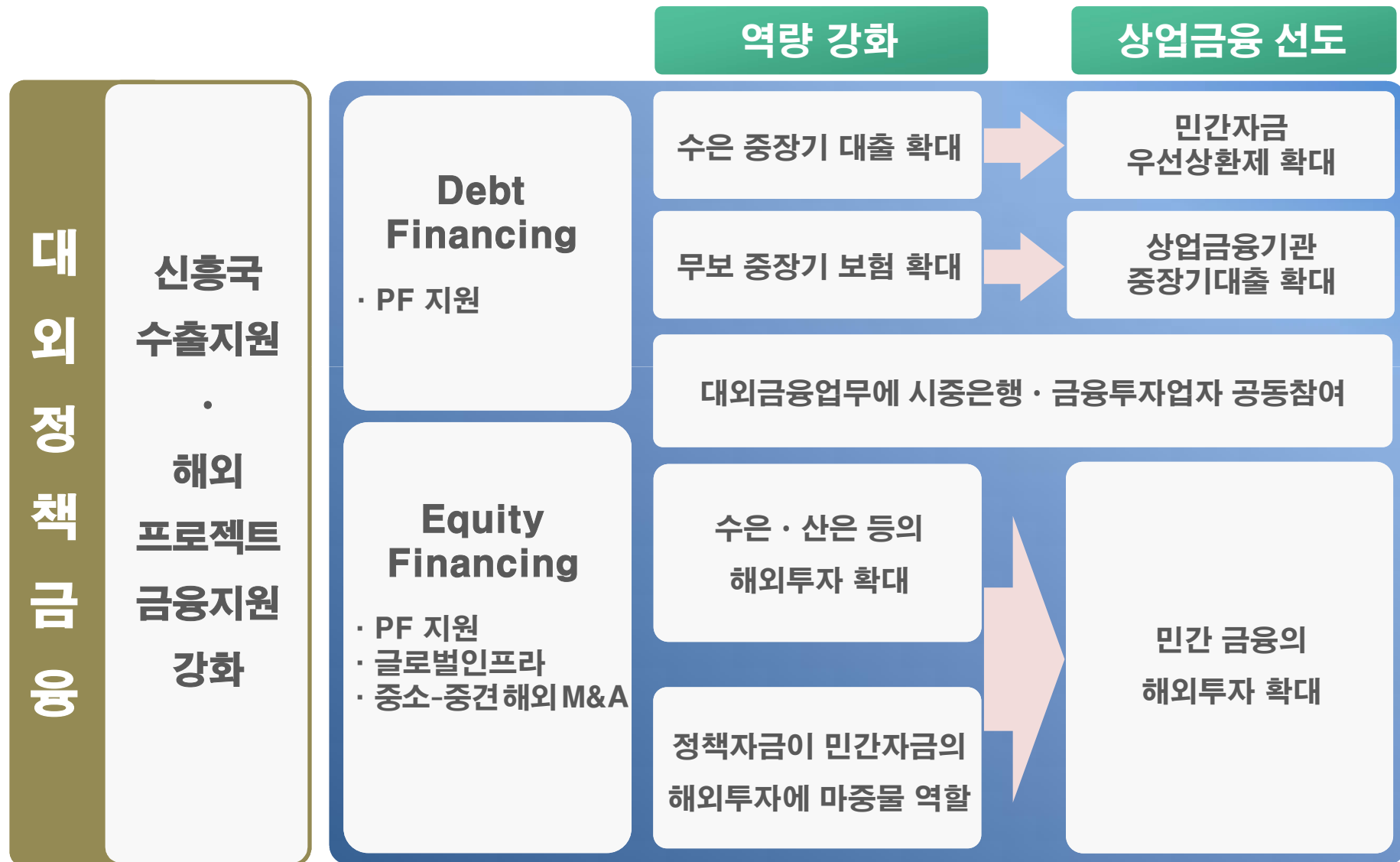
- 투융자 복합금융을 활용한 맞춤형 중기지원 생태계 구축

신기보

- 재무등급보다 미래가치 위주의 보증심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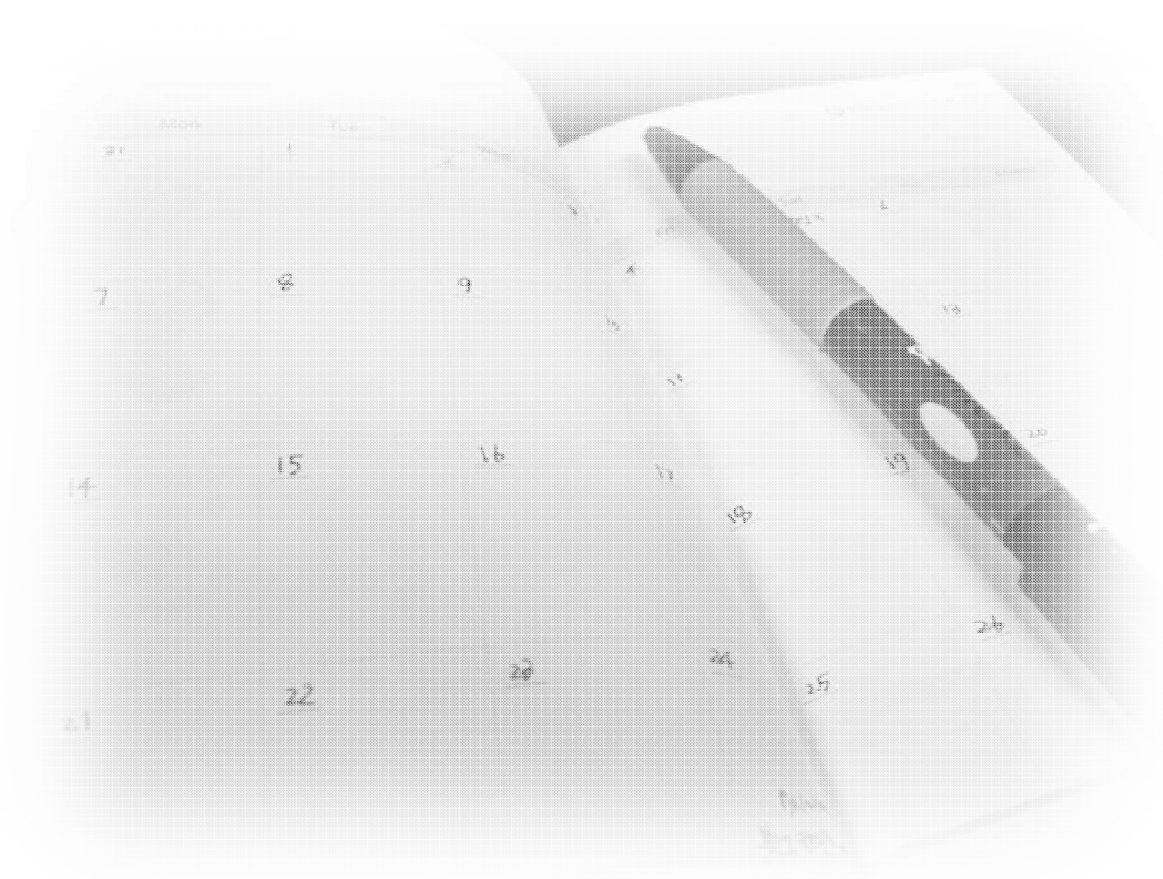
- TB 구축 통한 중소기업 기술평가 시장 선진화

IV 향후 역량강화 방향-대외 부문



V

향후 추진일정





향후 추진일정

일정

주요내용

- 13.9월 산은법 전부개정안 발의
- 13.9월~17.12월 수은, 무보 단기사업비중 축소
무보 기금배수 축소
- ~13.12월 산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수은법 시행령 개정
- ~ 14.6월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통합준비단 준비 작업
- 14.7.1 통합산은 출범

감사합니다

